

# 2016년 4.13 총선

## 사회적경제 공동공약 자료집



2016. 3

## 목 차

### ■ 20대 국회의 3대 약속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 국회내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 설치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법제도 개선

### ■ 7대 부문 주요 정책과제

- 보육 분야
- 교육 분야
- 청년 분야
- 보건의료 분야
- 돌봄 분야
-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
- 지역활성화 분야

### ■ 부록

- 7대 주요 정책과제별 해설

### 4.13 총선 시인적경제 공동공약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4.13 총선이 '정책 선거'가 될 것을 촉구하며,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②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한 국회내 초당적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 설치 ③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의 개선을 '20대 국회가 지켜야 할 3대 약속'으로 제시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 7개 분야의 정책과제'를 제출하여, 각 정당 및 후보들이 주요 공약으로 반영하도록 촉구합니다.

연대회의는 정책요구안을 토대로 중앙과 지역에서 활발한 정책제안 활동을 하고, 총선 이후에도 공약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 실천방향을 제시하여 20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20대 국민의 3대 약속

1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 사회적경제를 본격적인 국가적 의제로 격상
- 행정간막이 해소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 틀 마련
-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

2

## 국회내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 설치

- 초당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의제를 논의할 국회 차원의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 운영
- 상시적인 민정 협의구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기금등 관련 제도 정비, 협동조합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다양한 논의

3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법제도 개선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및 기금설치를 위한 기반 마련
- 사회적경제조직 간 다양한 연합조직 설립을 위한 기반 마련
-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조세 및 기업 환경 마련
-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 기반 마련
-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고용·노동 환경 기반 마련

약속 1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1

## 사회적경제를 본격적인 국가적 의제로 격상

- 사회적경제는 저성장 기조 및 세계경제의 혼돈 속에서 내수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국가경제의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양극화의 폐해를 줄여 사회통합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며, 사회서비스 및 각종 정부의 지원정책이 소수의 이익으로 집중되는 것을 방지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의 균형발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효과적인 지원, 민간자원봉사의 더욱 효과적인 운용 등 기존의 중요한 국가적 의제들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사회적경제를 향후 나라 발전의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하는데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 의제로 격상시키는 일에 20대 국회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함.
  - 총량 지표의 성장을 추구하는 경제와 사후적으로 분배하는 복지라는 도식에서 벗어나 자원의 투입, 생산활동에 대한 기회보장, 다양한 분배 방식의 채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회경제를 추구하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합의 필요

2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인 제도 틀 마련

- 행정간막이 해소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 틀 마련
  - 현재의 정책별 부처별 사회적경제 관련 제도는 민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자원을 결합하여 새로운 혁신을 이뤄내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함.
  - 사회적경제에 대한 더욱 광범위한 정의와 통합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필수적임.
  -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 가치, 정부의 역할 등을 명시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

### 3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

-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간 연대를 통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추구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시 사회적경제의 특성에 적합하게 지역 시장 및 지역 자원의 순환을 통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중요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사회적경제위원회, 지역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등 지역단위의 창의적인 활동과 정책이 수립, 실행되도록 제도적 권한의 부여 필요

### 약속 2 국회내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 설치

#### 1 초당적으로 사회적경제를 논의할 국회 차원의 기구 필요

- 초당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의제를 논의할 국회 차원의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의 창립과 활발한 운영
- 19대 국회의 정당별 사회적경제 모임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경제를 국가적 의제로 다루기 위해 초당적으로 결합한 특별위원회가 필요함.
- 각 상임위원회의 제도 정비에 앞서 제도 정비의 필요성, 우선순위 등에 대한 사전의 정당간 협의 등을 수행하고, 의안의 처리가 원만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현장의 활동 점검 및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역할을 통해 4년 내 지속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

#### 2 상시적인 민·정 협의구조를 마련

- 상시적인 민·정 협의구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기금 등 관련 제도 정비, 협동조합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다양한 논의
- 국회 특별위원회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포함되어야 할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수평적 파트너십을 민간과 정치권의 관계 속에서 선제적이고 모범적으로 실현시켜야 함.
- 민간 진영의 대표자들과 함께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 민간과 함께 설계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개선하는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함.

### 약속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법제도 개선

#### 1 사회적금융 활성화 및 기금설치를 위한 기반 마련

- 기존 자본시장의 현황만으로는 금융에 있어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제적·사회적 가치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반영에 한계가 있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시장에서의 정착과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초기 정책기금의 지지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의 경우 금융 및 기금 조성에 관한 시책 수립의 근거 규정 마련 필요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시 금융 및 기금 조성에 관한 시책 수립의 근거 규정 마련 필요
- 사회적경제조직의 공제사업은 자립기반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이를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 「사회적기업육성법」의 경우 최근 공제사업의 근거규정의 신설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금을 통한 지지기반 마련 필요
- 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율적·자립적 활동이라는 기본원칙과 상호 배치되는 것이 아닌 공제사업의 초기 안정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인프라 지원의 차원으로 접근 필요

#### 2 사회적경제조직 간 다양한 연합조직 설립을 위한 기반 마련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해당 조직 외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 간에도 협력·협업을 통해 자생력과 자립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합조직의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 「협동조합 기본법」에 「협동조합 기본법」 및 기존 개별 법률에 의한 협동조합이 다양하게 연합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필요
-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협업을 위한 연합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사회

적경제기본법」 제정시 개방적인 규정 필요

- 사회적경제 연합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연합조직에 대한 지원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어야 함.
- 사회적경제조직 연합조직의 유의성에 비추어 운영 및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연합조직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 사업에 우선적인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에 근거규정 필요

#### 3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조세 및 기업 환경 마련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공익지향성, 비영리지향성, 상호자조성 등에 기반한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수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 「법인세법」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정기부금 단체로 포함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지역사업형과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에 한정되어 「민법」상의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에 비해 그 범위가 협소하므로 지정기부금 범위를 필요성에 기초한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취약계층고용형 및 기타 공익증진형까지 확대할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에 기존 개별 협동조합법률에 따른 개별 협동조합들과는 달리 법인세에 대한 당기순이익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필요성에 기초한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당기순이익과세 인정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에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들과 유사한 수준의 세액감면제도 인정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은 장기보유우리스주의 배당소득과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근로종사자인 조합원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출자한 출자금도 성격상 우리스주 또는 조합에 대한 출자금으로 볼 것이므로 조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 4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 기반 마련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창출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가치 및 유용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공구매와 공유재산 등의 이용에 대한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공구매 및 조달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규정 필요
- 특히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사회에 공공적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위탁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 필요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시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근거규정 필요
- 「사회적가치법」, 「사회책임공공조달법」,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이른바 사회적책임조달에 관한 법률 제정의 적극적 검토 필요
- 공유재산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성을 지향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반영 필요

#### 5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고용·노동 환경 기반 마련

-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고용형태가 협동노동에 기반하여 경영과 소유 및 근로가 합성적으로 나타나는 특수성에 기반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실업과 산업안정 등 개별적·집단적 근로관계의 형성 및 노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에 협동조합 등 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신설 필요
- 노동자협동조합(직원협동조합)에 대한 별도의 “장” 규정 또는 「노동자협동조합법」 등의 개별적 제정 필요

### 7대 부문 주요 정책과제

1

### 공동체육아로 공동체시대를 가정 - 공동체 - 국가가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들

육아는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일로써 국가와 공동체, 각 가정이 함께 해야 할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 국가는 육아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는 아이들이 자라고 부모들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호혜적 관계로 바뀌어야 하며, 각 가정은 스스로 양육주체로서 부모의 역할을 하면서 아이를 함께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사회적경제 영역은 20여 년 동안 부모들과 교사가 함께 운영하는 공동육아협동조합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의 공동체육아의 가능성을 모색해왔으며, 육아의 협동이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주요한 토대가 될 수 있음도 증명하였다. 특히 영유아의 육아부터 초등학교까지의 아동돌봄을 부모와 교사의 협동으로 이뤄낸다면 공동체문화를 활성화하여 공동체성의 파괴가 심화되는 현재 사회의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보여주었다. 이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조건이다.

보육사회적협동조합은 국공립어린이집의 부모참여를 비롯한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며, 아이와 교사 부모의 인권을 실현하는 보육과 열린어린이집 정책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드는 일이다. 육아 돌봄공동체, 협동어린이집, 보육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경제국공립어린이집 등의 사회적경제가 바뀌갈 보육의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이 수립되어야 한다.

▣ 중점 과제

1. 국가는 육아의 사회적 기반을, 사회적경제는 운영의 공동체성을

- ① 국공립어린이집을 전체 어린이집의 30%로 확충
- ② 새로 확충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10% 이상을 사회적경제가 운영
- ③ 보육료 지원 현실화, 누리과정 보조금 중앙정부 책임
- ④ 바우처 방식에서 시설운영비 직접지원으로 전환

2. 육아부터 시작하는 사회의 공동체성 살리기, 공동체 영역의 확대

- ① 공동육아 돌봄공동체와 같은 품앗이 모임이나 공동육아나눔터와 같은 공간 지원
- ② 협동어린이집(구 부모협동어린이집) 설립 활성화와 운영 안정화
- ③ 보육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지원

2

### 더불어 행복한 시민을 키우자

우리의 교육은 협동을 급훈 등으로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바로 옆의 친구마저 경쟁자로 만들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협력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이다. 저성장 시대, 미래 세대의 자산은 협동하는 힘이다. 사회적경제는 사람을 가치의 중심에 두고 아이들의 삶에 노동, 나눔, 공동체, 절제의 의미가 스며들 수 있도록 돕는 대안적 경제 교육으로서 더불어 행복한 경제를 만들어 가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과정에서 나만이 아닌, 내 친구, 내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협동의 가치와 방법을 익혀가는 사회적경제교육 도입을 제안한다. 둘째, 방과후·돌봄·매점·식당 등 학교의 소비영역에서 지역 사회와 함께 학교협동조합을 통한 교육복지 강화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단순히 돌봄의 대상, 교육의 대상으로서만이 아닌 주체적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지역사회의 변화 주체가 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적경제와 교육의 만남은 지속가능한 상생의 삶을 지향하는 교육,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지역사회의 교육력은 마을이 품은 아이들이 교복을 입은 협동 시민으로 커가고, 청년이 지역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다. 이는 다시금 지역사회를 풍성하게 만들고, 교육력을 강화시키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 더불어 행복한 시민을 키우자.

▣ 중점 과제

1. 방과후 돌봄 협동조합 활성화로 공동체 돌봄 실현

- ① 사회적협동조합과 학교방과후의 학교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활성화
- ② 협동조합 방과후의 법제도화
- ③ 지역사회 초등방과후 및 체험활동 위주의 학교밖 방과후클럽을 활성화

2. 지역에서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기

- ① 마을이 교육공동체가 되는 '마을학교' 설립 확대
- ② 더불어 행복한 경제교육
- ③ 청소년들의 지역참여 활동 활성화

3. 협동을 통해 교육복지 해결

- ① 부모의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학교협동조합 매점
- ② 협동조합 방식의 대학 생활복지 강화
- ③ 지역밀착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



3

사회적경제로 청년에게 힘을 주는 사회 만들기

누구에게나 좋은 일자리와 적절한 주거가 제공되어야 한다. 단 한 번 안정적 소득을 누려본 적도 없이 경쟁에만 내몰리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더욱 절실하다. 우리는 주거환경을 포기하지 않고도 청년 스스로 비용을 내는 것이 가능한 청년주거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청년이 사회와 새로운 임대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공동체가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는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새로운 “일”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한다. 창업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키울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중점 과제

1. 청년주거, 청년과 사회의 새로운 임대계약 맺기

- ① 사회적경제로 1인 청년가구를 위한 다양한 청년 공공 임대사업 실시
- ②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 대책으로 청년시민을 위한 사회적경제 대안주택 도입

2. 협동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 ①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등을 통한 디딤돌 일자리 경험 제공
- ② 사회적경제 중심의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 ③ 지역인재 펠로우십 운영과 거점 공간 조성

3. 청년들의 동네 경제권 강화

- ① 청년들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 ② 대학과 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 협력 강화

4

건강의 평생친구, 주치의 제도  
평생주치의로 건강한 삶, 행복한 마을

작년에 발생한 메르스사태는 의료 공공성의 중요함을 국민모두가 실감하는 사건이었다. 국내 첫 번째 메르스 환자인 60대 남성이 확진(5월 20일)되어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약 10일간 4개 병원을 경유했다고 한다. 이는 OECD국가 중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한 전형적인 의료기관 소평 현상이다. 주치의제도가 없어서 최초 진료를 신뢰할 만한 주치의로부터 받지 못한 결과이다. 예방적 서비스 및 체계적인 만성질환관리로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인 주치의 제도의 도입이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저성장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과 건강불평등은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 심각한 사회갈등요인을 작용하고 있다. 지역사회내의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를 통해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돌봄 주치의 사업을 통해 건강한 마을을 만들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온 국민 주치의제도의 시행을 근간으로 해야 가능하다.

■ 중점과제

1. 노인 주치의 사업

- ① 노인 선택의원 등록제도 실시
- ② 지불 보상방식 전환(행위별 숫가제에서 인두제)

2. 장애인 주치의 사업

- ① 장애인 건강지원센터 운영
- ② 장애인 의료발전기금 조성
- ③ 장애인 건강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3. 장애인 통합재활센터 운영

- ① 재활치료서비스 의료비 급여화
- ②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 급여 현실화

**5**

**인권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 돌봄**

사람은 태어났으며 나이먹기까지 출산시의 돌봄, 영유아기의 돌봄, 노년기의 돌봄 등 다양한 종류의 돌봄을 필요로 한다. 현대에 들어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단독가구의 증가, 급속한 고령화는 이제 돌봄을 개인이나 가정이 아닌 사회가 책임지도록 만들고 있다.

돌봄은 상품이 아니라 대인서비스이기 때문에 수요자와 종사자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질 높은 서비스의 핵심요건이다. 하지만 현재 돌봄은 거의 시장에 내맡겨져 있으며 이러한 과도한 시장화와 이윤 추구는 종사자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고,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온존시키며, 서비스 질 제고를 가로막아 결과적으로 종사자와 수요자 양쪽의 인권과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

종사자와 수요자를 비롯해 지역주민이 함께 만드는 공동체 돌봄이 인권과 민주성, 투명성을 보장하여 국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대안이다.

■ 중점과제

**1. 가족 부담을 덜고 우리 동네에서 노년을 맞기 위한 어르신 돌봄서비스 확충**

- ① 시군구별 1개소 이상 공공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노인요양원 설치
- ② 정부의 노인종합돌봄서비스 2배 이상 확대
- ③ 공공성,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어르신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 ④ 가족과 어르신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수발·요양 정보 제공, 노인가구의 주거·안전관리, 방문사례관리 등을 총괄하는 ‘가족안심 우리마을 어르신센터’ 설치

**2. 수요자와 종사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돌봄협동조합의 활성화**

- ① 가사노동자들이 운영하는 돌봄협동조합에 세금 감면 및 사회보험료, 교육 지원
- ② 정부 돌봄바우처사업 종사자에게 생활임금 보장으로 고용안정과 서비스 질 개선
- ③ 한부모가정 통합돌봄서비스, 산후관리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대상을 2배 이상 확대하고 돌봄 노동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에 우선 위탁

**3. 기초지자체별 돌봄계획의 수립과 지역돌봄센터 설치**

- ① 기초지자체 단위의 돌봄계획 수립과 지역주민 중심의 돌봄위원회 설치
- ② 지역주민과 종사자, 기관들에게 실시간 정보 및 상담,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지역 돌봄센터(local care community center) 설치

**6**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이끄는 사회적 경제**

지금 세계 곳곳은 기후변화의 몸살을 앓고 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식량위기는 가정의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화석에너지와 핵 발전에 의한 에너지는 더 이상 값이 싸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사회적 경제는 이윤의 극대화, 탐욕을 정당화하는 경제가 아니라 필요의 충족을 위한 경제, 자연을 착취하지 않고 후세대와 공유하는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 발휘될 잠재력 역시 매우 크다. 특히 식량과 에너지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2015년 UN은 기존의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신할 지속가능발전목표(CDGs)를 채택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17개의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루고자 하는 세부 과제들을 담고 있다. 또한 국제협동조합연맹 역시 2016년 세계 협동조합의 날 주제로 “2030년을 향한 협동조합 : 지구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의 파트너십”을 채택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가기로 했다.

날로 낮아지는 한국의 식량자급률과 농촌의 몰락,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위험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는데 사회적 경제는 매우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중점과제

**1.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과 소비**

- ① 시민 주도형 재생 가능한 에너지 협동조합의 확산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목표 수립
- ② 안정적인 시민주도 에너지 사업의 보장을 위한 국공유지 및 활용가능한 유휴공간 등의 장기 임대
- ③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시설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지원과 발전단가의 보장
- ④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2. 도-농의 상생과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림어업분야 협동조합의 육성과 활성화**

- ① 농림어업분야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정책 정비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기존의 농림어업 분야 경영체 지원정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 정책 및 지원 대상 정비
- ② 농업협동조합의 민주화(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 및 경제사업 강화

### 3. 농촌과 연계, 연대하는 도시민의 소비협동조합 활성화

- ① 아파트 단지, 마을단위 소비자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활성화
- ② 기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 국내산 농축수산물 직거래사업 활성화
- ③ 도시 소비자 협동조합 - 농촌 생산자 협동조합 간 교류활동 활성화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수록 이윤을 추구하기 쉽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구매력이 없어진 구도심이나, 사람들이 적은 농산어촌에서는 기업들이 들어오려 하지 않는다. 시장의 매력이 없어진 지역일수록 시장의 실패는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지역의 주민들에게 사회적경제는 새로운 희망을 보여준다.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젊은이들을 사회적경제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더 쉽게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자. 농어촌에 희망이 생긴다.

구도심재개발을 하드웨어투자에서 벗어나 사회적경제와 함께 하는 방식을 도입하자. 임대주택 및 공공자산을 만들어 청년창업과 연결시켜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점을 없앤다면 많은 창의적인 생각이 모여들 것이다.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회적경제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지역은 도시와 농촌 모두에게 필요하다.

#### ■ 중점과제

##### 1.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농산어촌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

- ① 농어촌지역 의료 및 복지 전달을 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② 지역생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기업에 대한 지역기업인증제도 도입

##### 2. 도시와 농촌의 지자체, 민간 사회적경제조직이 협력하는 귀농귀촌 정거장 운영

- ① 귀농귀촌 준비부터 마을정착까지 사회적경제의 윈스톱 플랫폼 마련
- ② 자산 이동 및 농어촌 기반 확보를 위한 후건조직 역할에 대한 지원정책 도입

##### 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공유자산 기반 구도심개발, 주거환경개선

- ① 표준임대료를 보장하는 공유자산 확보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도입
- ②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공유건물 도입 및 임대주택협동조합 설립 지원

## ■ 7대 부문 주요 정책 과제별 해설



- 가정양육의 고립성과 힘겨움을 해결하기 위한 마을 내 가정양육자들의 공동체모임이 큰 성과를 보이고 있음. 공동육아 돌봄공동체와 같은 품앗이 모임이나 공동육아나눔터와 같은 공간 마련 등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책이 확산되고 지속되어야 함.

-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을(지역)내 공동육아활성화 사업과 같이 가정양육의 공동체문화 만 들기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함.

○ 협동어린이집(구 부모협동어린이집) 설립 활성화와 운영 안정화

- 부모들 또는 부모들과 교사들이 협동하여 아이를 함께 키우는 ‘협동어린이집’(구 부모협동 어린이집유형)은 전체 어린이집의 0.3%밖에 되지 않음.

- 협동어린이집은 부모가 실질적인 운영주체이기 때문에 운영의 투명성, 부모의 참여, 교사 들의 처우개선과 인권보장, 운영 참여 등 한국보육의 과제를 해결해온 중요한 성과이자 모 델임(인권보육 실현).

- 그러나 부모들이 어린이집 공간 마련부터 교사 처우개선에 이르는 모든 비용을 책임을 져 야 하는 상황에서 확산이 어려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함.

- 협동어린이집의 상당수가 부모 전원의 동의를 얻어 CCTV를 설치하지 않았음.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음을 보여주는 성과임.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상황에서 부모의 동의를 얻어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그 성과를 확산해야 함.

- 협동어린이집은 아이와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고 복수담 임제나 보조교사를 활용하여 아이들의 놀 권리와 교사들의 안정적 돌봄 권리를 실현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왔음. 그러나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므로 협동어 린이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협동어린이집의 확산과 더불어 모든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기 위한 지원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협동어린이집의 공간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공간마련을 위한 저리용자 지원 또는 지역 내 유휴공간의 사용허가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 협동어린이집의 장기적 안정화를 위하여 졸업부모도 부모로서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함.

○ 보육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지원

-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계획과 더불어 그것을 공동체보육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새 로운 운영주체로서 보육사회적협동조합을 육성해야 함.

- 서울시는 사회적경제가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정책을 실행 중. 이 사업을 여러 지역에 확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주체가 안정적으로 보육을 담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직되 어야 함.

- 보육사회적협동조합은 두 가지 유형으로 가능. 하나는 지자체와 지역내 보육관계자들, 그

리고 사회적경제활동가들이 함께 만드는 지역별 보육사회적협동조합이고 또 하나는 부모 와 교사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보육사회적협동조합임.

■ 세부 과제

- ① 공동육아 돌봄공동체와 같은 품앗이 모임이나 공동육아나눔터와 같은 공간 지원
- ② 협동어린이집(구 부모협동어린이집) 설립 활성화와 운영 안정화
- ③ 보육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지원

[ 관련 정당 공약 ]

| 출처          | 구분                            | 관련 내용   |
|-------------|-------------------------------|---|
| 정의당 (2016)  | 안전 관리 강화                      | - 보육119, 보육전담공무원, 개방형어린이집 실시로 안심어린이 집 실현<br>- 보육119 도입 : 보육시설 내 인권침해 발생시 출동 상황점검, 종사자의 익명고발시 출동, 아동심리상담 전문가와 현장조사 공무원 등 팀 출동, 필요시 경찰수사 의뢰<br>- 읍면동마다 보육전담공무원 배치 ;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보 육시설 일상적 지도 관리감독   |
| 녹색당 (2016)  | 인권 보육 실현 아동복지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 ○보육의 공공성을 넘어, 아동 양육자 그리고 교사 모두를 위한 ‘인권보육’을 실현한다<br>- 복지서비스에 공공성 가치를 부여하는 동시에 복지서비 스 종사자의 노동에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고, 복지서비스를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형태로 전환하여 누구나 책임지고 참여하는 형태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br>- 사회서비스 시민운영 및 감시기구 활성화, 시민들의 복지주체 성, 발언권, 의사결정권을 회복하는 장치 마련, 복지서비스 종사자 의 경영참여, 복지서비스의 시민사회 협치 구조 구축<br>- 어린이집과 같이 실제 이용자가 충분히 서비스 질을 표현하기 어려운 시설의 경우, 이용자 가족이 운영이사회 또는 감사회에 1/3 이상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기적으로 총회에 참석하 는 것을 제도화한다.<br>- 서로 돌봄의 사회적 대안인 마을공동체에 다양한 여성들의 삶 터를 만든다 |
| 새누리당 (2016) | 최고위원회 주요내용 (3.14)             | ○“마더센터”는 모든 예비엄마와 엄마들을 위한 미래형 보육플랫 폼으로 마더센터 설립 지원 확대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 부 등 정부의 각 부처에 분산되어있는 출산, 보육, 돌봄서비스를 통합하고 큐레이팅하여 부모에게 윈스톱으로 1:1로 제공<br>-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유통기업 등 부모의 접근이 쉬운 기업과의 민간협력을 통해 구축<br>-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해서 마더센터에서 실시<br>- 엄마도우미 양성으로 1:1로 가족 지원  |
| 새누리당 (2014) |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 마련               | ○ 아동학대 근절 위한 종합대책 마련<br>- 아동 학대 등 가정 폭력 관련 중앙관리시스템 구축   |

| 출처         | 구분           | 관련 내용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폭력 방지 교육에 아동학대방지 교육 포함 실시</li> <li>- 신고 이행을 제고를 위한 아동학대 방지 통합매뉴얼 제작 및 교육 현장 시행 상황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li> <li>- 아동보호기관에 대한 정부 관리 감독 및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형 마더센터'를 설립해 육아서비스 원스톱 제공</li> </ul> </li> <li>- 현재의 보육서비스는 보육시설, 시간제 보육, 보육정보센터, 동사무소 지원 등 기간별로 흩어져 있는 상황</li> <li>- 부모들이 손쉽게 육아에 관한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지역 내 다양한 육아서비스에 대한 허브 역할을 하는 공간이 필요</li> <li>- 한국형 마더센터(영유아플라자) 도입 : 육아정보 제공, 부모상담 및 아동 심리발달 검사 지원, 부모교육 제공, 도서 및 장난감 대여를 포함한 영유아전용도서관 운영, 시간제 보육 운영, 부모들의 쉼을 위한 부모카페 운영 등 자녀 육아에 관한 종합서비스 제공</li> </ul> |
| 정의당 (2014) | 육아서비스 원스톱 제공 |   |

2

**더불어 행복한 시민을 키우자**

▣ 과제별 해설

**1. 방과후 돌봄협동조합 활성화로 공동체 돌봄 실현**

- 초등 방과후 돌봄을 보편적 복지의 범주에서 접근해야 함.
  - 현재 초등방과후 돌봄은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학교내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법과 제도 안의 사업과 협동조합 방과후 또는 공부방 등과 같은 학교밖의 비인가활동들이 공존하고 있음.
  - 기존의 정부정책은 계층간 분리와 저소득층 위주의 초등돌봄만을 정책화했고, 최근 학교내 초등돌봄교실을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시작하고 있으나, 진행상황은 매우 열악함.
- 사회적협동조합과 학교협동조합의 학교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활성화
  - 초등 방과후 돌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실시한 학교내의 초등돌봄교실은 양적으로는 거의 모든 학교에 설치하는 성과를 보였으나 운영면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 또한 이번 누리과정보조금문제와 더불어 초등돌봄교실재정도 위기에 처하고 있음. 안정적인 재정배정과 초등돌봄교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이 절실
  - 초등돌봄교실은 학교생활을 마친 아이들의 쉼과 놀 권리를 보장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하고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어야 함. 그러나 학교별로 한 두 개의 교실에 교사 1명이 배치되어 아이들을 관리하는 공간이 되고 말았음. 초등돌봄교실이 아이들의 자유롭게 즐거운 방과후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함.
  - 교사 대 아동비를 적정화가 고려되어야 함. 교사 1인은 관리인원과 같이 지낼 수밖에 없는 현실. 아이들의 활동공간으로서의 교실운영을 위해서, 교사들의 쉼과 교사로서의 역할확대를 위해서 돌봄교사를 증원해야 함.
  - 적은 교사가 많은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어서 초등학교 공간에 있으면서도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도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 초등돌봄교실 아이들이 학교공간을 다각적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운영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공동체돌봄을 실현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학교협동조합이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학교내 초등돌봄교실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방과후에 대한 아이와 부모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 마을이 기반이 된 방과후·돌봄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해야 함. 학부모, 방과후강사,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지역 기반 방과후·돌봄 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지원하고 이를 위하여 현재 모범적으로 방과후 운영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방과후를 법제도화하여야 함.
- 학원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초등이후 학령기 아동의 자기성장과 다양한 활동경험을 제공하여 자율적인 청소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과후클럽이나 센터 등을 활성화해야 함. 이를 위하여 마을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마을 방과후 강사 양성도 필요함.

▣ 세부 과제

- 1 사회적협동조합과 학교방과후의 학교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활성화
- 2 협동조합 방과후의 법제도화
- 3 지역사회 초등방과후 및 체험활동 위주의 학교밖 방과후클럽을 활성화

[ 관련 정당 공약 ]

| 출처         | 구분                             | 관련 내용   |
|------------|--------------------------------|---|
| 정의당 (2016) | 방과후 프로그램 종합대책 마련               | - 방과후 프로그램 종합대책 마련<br>- 조례제정과 방과후협의체 운영(지자체, 교육청,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기관, 학부모 및 학생 참여)<br>- 구립방과후센터를 설치해 맞벌이부부를 위한 안심 방과후서비스 제공<br>- 민관협력방식으로 기 시설 무상임대 추진 등 지역자원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br>- 방과후서비스 제공 및 지역 민간기관 지원의 허브 역할 담당  |
|            |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개선                  | o 외주형태의 방과후돌봄교실 운영 개선 및 확대<br>- 방과후 학교는 특성화 중심교육으로 전환<br>- 돌봄교실은 원하는 수요만큼 확대<br>-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 강화, 교원 대폭 증원<br>-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의 선택권 존중   |
| 녹색당 (2016) | 아동복지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 o 복지서비스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립하겠다.<br>- 보육교사 동일노동 동일임금 권리, 노동조건에서도 권리. 보육교사 임금수준 개선과 처우개선. 방과후교사 등 다양한 돌봄종사자들의 처우수준은 사회서비스 노동인 공무원 수준에 이르도록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br>- 특수 작업환경에 있는 대인서비스 종사자들의 안전문제와 감정노동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자기개발을 실현할 수 있는 지원체계 갖추어야 한다.<br>- 휴가보장, 건강검진, 공제회 등 실질적인 복리혜택 정책을 마련한다. |
| 민주당 (2014) | 방과후 돌봄정책                       | o 촘촘한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br>- 방과후 홀로 방치되는 아동 청소년이 없도록 통합적 방과후 돌  |

| 출처         | 구분       | 관련 내용  |
|------------|----------|--|
| 새누리 (2012) | 방과후학교 운영 | <p>분정책 추진</p> <p>(1) 방과후 학교 운영 내실화(16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저소득층에 대한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지원</li> <li>- 차상위계층 40%, 월 3만원 → 차상위계층 100%, 월 6만원 지원</li> <li>-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 (1천개→3천개)</li> <li>o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방과 후 학교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학교기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li> <li>o 관련 예산 반영 및 실천프로그램 운영</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기존의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돌봄 교실을 확대 설치, 보육교사, 방과후 지도교사 및 운영비 지원(190쪽)</li> <li>- 방과후 돌봄교실은 학교수요에 따라 1교 1실을 2~3개로 증설</li> <li>- 주5일 수업에 따른 맞벌이 저소득층계층의 '나홀로 자녀'를 위해 토요 돌봄교실 확대 운영</li> <li>o 내 아이도 함께 키우며 일하는 여성 일자리 창출 효과</li> <li>- 지역별, 독립된 '어린이센터' 설치로 주택 가까이의 공간에서 어린이 돌봄 서비스와 활동 프로그램 제공</li> <li>- 방과 후 방치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학교 사회복지 내실화를 추진하며, 학교와 지역사회 및 가족의 복지지원체계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복지체계 연계 및 복지전달체계 개편 추진</li> </ul> |
| 민주당 (2012) | 방과후 돌봄교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기존의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돌봄 교실을 확대 설치, 보육교사, 방과후 지도교사 및 운영비 지원(190쪽)</li> <li>- 방과후 돌봄교실은 학교수요에 따라 1교 1실을 2~3개로 증설</li> <li>- 주5일 수업에 따른 맞벌이 저소득층계층의 '나홀로 자녀'를 위해 토요 돌봄교실 확대 운영</li> <li>o 내 아이도 함께 키우며 일하는 여성 일자리 창출 효과</li> <li>- 지역별, 독립된 '어린이센터' 설치로 주택 가까이의 공간에서 어린이 돌봄 서비스와 활동 프로그램 제공</li> <li>- 방과 후 방치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학교 사회복지 내실화를 추진하며, 학교와 지역사회 및 가족의 복지지원체계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복지체계 연계 및 복지전달체계 개편 추진</li> </ul> |

2. 지역에서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기

- (1) 마을이 교육공동체가 되는 '마을학교' 설립 확대
  - o 마을이 교육공동체가 되는 '마을학교' 설립 확대
    - 지자체와 지역 교육청, 학교와 지역사회(마을, 교육자치 등)를 연결하는 협업 체계 구축
    - 마을과 학교의 교육 연계 ('은 마을이 학교다'라는 정신에 입각하여 학교 밖 프로그램 적극 도입)
    - '학교협동조합', '마을학교', '교육협동조합' 등에 대한 설립 및 운영 지원 (방과후교실,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창의체험활동 등 우선위탁)
  - o 마을 창의체험 활동 활성화
    - 지역사회의 가용 교육인프라를 체험학습으로 연결
    - 마을 여행 및 마을교재 개발(예. 성동구 마을교재, 성북구 마을여행 개발)
- (2) 더불어 행복한 경제교육
  - o 초중등 교육과정, 사회·경제 등 교과에 사회적경제관련 내용 반영
    - 사회적 경제의 가치인 협동과 연대, 호혜와 상생 등의 가치는 미래세대의 인격형성과정에 협동적 사회성을 갖출 수 있는 교육적인 프로그램
    - 지역과 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시민활동·경제활동의 주체적 역량 함양
  - o 청소년 사회적경제지역교과서 개발
    - 사회적경제지역교과서 개발(예. 서울시 사회적경제교과서 개발, 아산 청소년 사회적경제



교재, 용인 청소년 사회적경제워크북 개발, 구로구 <사회적 경제, 참 좋다> 등)

- 교과활동(교육 내용 재구성), 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자율활동 등), 범교과서 학습 주제(민주시민교육, 경제교육, 근로정신함양교육, 소비자교육, 진로교육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는 영역), 자유학기제 등에서 활용

(3) 청소년들의 지역참여 활동 활성화

- 사회적경제방식의 지역참여 활동 활성화
  -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변화를 이끌어가는 사회적경제방식의 지역변화프로젝트 활성화
  - 지역별 청소년위원회를 구성 및 지역 교육현안의 의사결정에 관한 참여 제도적 보장
- 청소년이 만들어가는 학교
  - 학부모, 지역주민 등과 함께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는 자율학교(예. 의정부 꿈 이름 학교)

■ 세부 과제

- 1 마을이 교육공동체가 되는 '마을학교' 설립 확대
- 2 더불어 행복한 경제교육
- 3 청소년들의 지역참여 활동 활성화

[ 관련 정당 공약 ]

| 출처          | 구분                  | 관련 내용  |
|-------------|---------------------|--|
| 녹색당 (2016)  | 학교협동조합 설립 지역청소년 위원회 | <학교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교육을 강화하겠다.>(72쪽)<br>○ 초중고생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를 위한 사회적경제 교육, 협동 교육 강화<br>○ 사회적경제 조직 연계 진로체험, 동아리활동,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및 활성화<br><지역별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교육현안의 의사결정에 관한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165쪽)<br>○ 북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청소년 자치 조직이 지역의 교육조례 제정의 의사결정단위로 참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조례 제정, 교육예산 심의 등 교육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 결정에는 반드시 지역별 청소년위원회가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겠다. |
| 새누리당 (2014) | 교육환경 조성             | <아이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46쪽)<br>○ 학습부진 학생 기초학력 보장<br>-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및 두드림학교 운영, 온라인 보충학습자료 제공 시스템 마련<br>○ 지역 내 학교 체육·예술 교육 지원 확대<br>○ 학업중단 학생 대상 「희망손잡기 프로젝트」 지원  |

| 출처         | 구분       | 관련 내용  |
|------------|----------|--|
|            |          | - 학업중단 전·후 학습, 취업 등 정보제공, 검정고시 정보 제공 및 무료 강좌 개설 등<br><일반 고등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해 교육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47쪽)<br>○ 일반고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다양화 추진<br>- 필수 이수 단위 축소, 학교 자율과정 이수 범위 확대, 과목별 이수 단위 증감범위 확대 등<br>○ 일반고 학생 개인이 원하는 진로 집중과정 선택 및 직업교육 확대 추진   |
| 정의당 (2014) | 마을 교육공동체 | <마을이 교육공동체가 되는 '마을학교' 설립>(100쪽)<br>○ '은 마을이 학교다'라는 정신에 입각하여 학교 밖 프로그램 적극 도입<br>○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 운영하는 '마을학교' 설립<br>○ 지역사회의 가용 교육인프라를 체험학습으로 연결<br>○ 마을학교를 통하여 학생들이 학교 밖 체험활동 경험, 다양한 형태의 직업체험, 지역사회활동 참여<br>○ 청소년 이용시설 대폭 확충<br>○ 봉사, 체험, 노동, 취미, 스포츠 등 다양한 마을학교 프로그램 개발<br>○ 마을 교육 함양을 위한 지역 인프라 및 자원봉사, 재능기부 네트워크화<br>○ 마을학교와 학생을 연결해주고 이들을 돌봐줄 마을선생님 양성<br>○ 교육자치와 행정자치의 협업 도모<br>○ 마을학교 운영에 인센티브 제공 |

3. 협동을 통해 교육복지 해결

(1) 부모의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학교협동조합 매점

- 학교협동조합 매점 확산
  - 불량식품, 빵서늘을 방지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협동조합 방식의 매점 확산
  - 학교협동조합 지원법 제정을 통해 학교협동조합 설립, 운영, 회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학교협동조합 매점 운영지원
  - 혁신교육지구 등 지역 단위 교육정책사업과의 연계 활성화
  - 임대료 및 공중 문제 개선

(2) 협동조합 방식의 대학 생활복지 강화

- 대학협업(대학생활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제도 강화
  -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대학협업 운영안정화: 학교 현장에 협동조합 설립, 운영에 대한 계획을 신설

- 교육부 대학평가 기준에 '협동조합' 관련 항목을 신설
- 대학생협 조합원에게 제공, 공급하는 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대학생협 임대료 문제 해결
- 주택협동조합 기숙사 통한 주거문제 해결
  - 협동조합 방식의 기숙사 설립 통한 기숙사비 및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 지원  
예)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3) 지역밀착 사회적경제전문인력 양성

- 사회적경제전문인력 양성
  - 대학·대학원에 협동조합 관련 과목·과정을 도입하는 등 청년 인재를 적극 양성
  - 사회적경제 전문대학·대학원 지정해 지역 사회적경제전문인력 양성  
(예, 경남과기대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 정부의 창업보육전문대학 등)
  - 사회적경제분야 진로탐색 프로그램 도입
- 공무원 교육기관의 사회적경제교과목 신설
  - 지역공무원의 사회적경제이해도 제고 및 업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사회적경제 실무' 과정 개설 등 공무원 대상 교육 진행

■ 세부 과제

- ① 부모의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학교협동조합 매점
- ② 협동조합 방식의 대학 생활복지 강화
- ③ 지역밀착 사회적경제전문인력 양성

[ 관련 정당 공약 ]

| 출처            | 구분               | 관련 내용   |
|---------------|------------------|---|
| 녹색당<br>(2016) | 학교협동조합           | <p>&lt;학교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교육을 강화하겠다&gt;(72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고생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를 위한 사회적경제 교육, 협동교육 강화</li> <li>○ 사회적경제 조직 연계 진로체험, 동아리활동,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및 활성화</li> <li>○ 학교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확대(공증, 수의계약시 임대관련)</li> <li>○ 교육부 내 학교 협동조합을 담당하는 전문직의 신설</li> </ul> |
|               | 대학생활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 <p>&lt;대학생활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 제도를 강화하겠다.&gt;(72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생협 조합원에게 제공, 공급하는 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li> <li>○ 교육부 대학평가 기준에 '협동조합' 관련 항목을 신설</li> </ul>  |

| 출처             | 구분                           | 관련 내용   |
|----------------|------------------------------|---|
| 새누리당<br>(2014) | 청년 대학생 주거부담 완화 기숙사 등 주거지원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대학생협 운영안정화: 학교 현장에 협동조합 설립, 운영에 대한 계획을 신설</li> </ul>  |
|                |                              | <p>&lt;2030 세대의 주거 부담을 대폭 줄이겠습니다&gt;(53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대학생 주거 부담 완화 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복주택 조기 공급 및 전국으로 확산, 대학생 전세 임대 공급 확대</li> <li>○ 행복(공공) 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지원 확대</li> <li>- 2030 세대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특례 적용 시한 연장</li> </ul> </li> </ul> |

### 3 사회경제로 청년에게 힘을 주는 사회 만들기

▣ 과제별 해설

1. 청년주거, 청년과 사회의 새로운 임대계약 맺기

(1) 사회적경제로 1인 청년가구를 위한 다양한 청년 공공 임대사업 실시

- 셰어형 기숙사
  - 청년 1인가구를 위해 낡은 고시원 및 모텔 등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셰어형 기숙사로 활용
-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 민간토지를 공공이 매입하여 저렴하게 장기 대부, 민관 거버넌스 형태로 사회주택 공급
- 대학생 희망하우징
  - 대학생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가구 다세대주택 매입물량의 일정량을 공급, 저렴한 임대료 책정(시세 30% 이하)으로 부담 경감
-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6년간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공급
- 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
  - 대학생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거주 공간 제공, 세대융합형 토크어빙사업 참여 가구에 환경개선 공사 지원
- 자치단체 청년맞춤형 공공주택
  - 매입임대주택의 일정 물량(30% 이내)을 활용하여, 각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청년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

(2)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 대책으로 청년시민을 위한 사회적경제 대안주택 도입

- 대안적인 주택 만들기
  - 청년시민 스스로 지불가능한 대안적인 주택
  - 공공체성이 강한 대안적인 주택
  - 자치단체 협력이 가능한 대안적인 주택
- 대안주택의 제도적 운용
  - 자치단체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 하는 민간투자사업
  - 자치단체 사회주택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대안주택 사례
  - 민관공동출자형 사회주택

- 공공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
- 빈집 리모델링

▣ 세부 과제

- ① 사회적경제로 1인 청년가구를 위한 다양한 청년 공공 임대사업 실시
- ②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 대책으로 청년시민을 위한 사회적경제 대안주택 도입

[ 관련 정당 공약 ]

| 출처             | 구분             | 관련 내용   |
|----------------|----------------|---|
| 더불어 민주당 (2016) | <더불어 잘사는 경제>   |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더불어성장론' 보고서(3쪽) <셰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 제공><br>○ 국민연금을 활용한 재원 10조원으로 다세대·다가구(1가구 3실 기준, 1가구 2억 원 가정)를 매입하여, 1인 기준 월세 30만 원이하 셰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을 준비하여 15만 청년층에게 제공함  |
| 새누리당 (2016)    | 배려나누기          | 빈집 등을 활용하여 청년, 독거노인 등을 위한 1~2인 가구 임대주택으로 제공<br>- '17년부터 '20년까지 매년 60억원의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1:2 매칭)하여 1~2인 가구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땅은 주차장, 쌈지공원, 텃밭, 어린이놀이터 등 공공시설로 활용<br>* 세대당 6천만원 지원시 : 국비 1,000만원 + 지자체 2,000만원 + 집주인 3,000만원 부담<br>** '(가칭)도시 빈집등 정비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지자체별 빈집 정비 기본계획 수립, 활용사업 지원, 빈집 관리 정보체계 구축, 토지수용권 등 제도 마련<br>○ 국공유지 등을 기숙사 건립 부지로 활용하여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 건립을 확대<br>- 대학 기숙사가 부족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년 2개소씩 건립 추진(지역별 기숙사 수요 분석을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br>- 공공기금 또는 민간기부금, 국고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하여 건립비를 확보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기숙사를 제공<br><사례> 부산 행복(연합)기숙사 : 건축비의 10%(41억원)를 국고로 지원(월 21만원)<br>고양 행복(연합)기숙사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건축비 전액(326억원) 기부(월 15만원)<br>- 건축비 : 공공기금(주택도시기금, 사회진흥기금), 국고 지원<br>- 사업부지 : 국·공유지 무상 사용<br>- 기숙사 1개소 당 총 사업비(1,000명 수용규모) : 약 400억원(건축비)<br>첫째, 흠뻑한 주거지원 정책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실현하겠습니다.<br>① 민간사업자만 특혜받고 서민부담 주거비는 줄어들지 않는 뉴스테이를 폐지하고, 다양한 유형의 반값임대 공정주택(정의 stay)를 공급하겠습니다.<br>② 부양의무자 기준과 생계급여 연계방식을 폐지하여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여 현재의 81만 가구, 월평균 11만원에서 소득하 |
| 정의당 (2016)     | [주택공약] 정의로운 복지 |   |

| 출처 | 구분 | 관련 내용   |
|----|----|---|
|    |    | <p>위 20% 이하에게 월평균 2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p> <p>③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임대료 상승률은 5%에서 3.3%로 인하, 계약갱신권 1회 보장, 개별주택에 대한 공영임대료로 전월세 세입자를 보호하겠습니다.</p> <p>④ 전세보증보험 의무화로 깡통전세 발생시 세입자 피해를 방지하고, 저소득층 세입자에게는 보증수수료를 일부 지원하겠습니다.</p> |

## 2. 협동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1)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등을 통한 디딤돌 일자리 경험 제공

○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           |   |
|-----------|---|
| <b>사례</b> | <p><b>서울시 청년뉴딜일자리 사업 사회적경제분야 청년혁신활동가</b></p> <p>사업대상: 만19세 ~ 34세 서울 거주 졸업예정자 및 미취업 청년</p> <p>지원내용: 최대 23개월, 사회적경제 “일” 경험 기간 동안 인건비 지원</p> |
|-----------|---|

○ 사회적경제 디딤돌 일자리 경험 제공

-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일” 경험 기회 제공
- 전문지식, 업무스킬, 직무소양, 네트워크 등 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역량 향상
- 최소 2년 이상 역량 향상 기간 제공 후 사회적경제 영역 취업 및 창업 연계

(2) 사회적경제 중심의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 사회적경제 중심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           |   |
|-----------|---|
| <b>사례</b> | <p><b>경북사회적기업종합상업동조합</b></p> <p>조합원: 경상북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및 후원자</p> <p>사업내용: (예비)사회적기업 판로개척 및 청년 일자리 창출</p> <p>“자치단체 공공구매+중앙정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사회적기업 지원 제도+ 대기업 CSR의 종합적 연계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p> |
|-----------|---|

○ 사회적경제 분야 좋은 일자리 만들기

- 사회적경제 분야 종사자 인건비 “생활임금” 적용
- 사회적경제 “좋은 일자리 기준” 만들기 \*ILO 'Decent Work' 기준 도입

(3) 지역인재 펠로우십 조성파 거점 공간 조성

○ ‘지역인재 펠로우십(fellowship) 프로그램’ 운영

- 잠재적 지역리더로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청년인재 육성
- 생활비와 활동비 일부를 지원하여 외지로 갔던 청년들이 지역에 돌아올 수 있도록

록 유도

- ‘청년 거점 공간’과 함께 지역사회와 청년의 접점을 만드는 유인동기로 활용
- 청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청년 거점 공간’ 구축
  -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형 청년단체,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자립형 청년단체, 마을살이를 위한 공동체형 청년단체 등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구축
  - 청년단체, 청년인재, 청년스타트업 기업들의 협업 공간(Co-working space)으로 활용
  -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지역의 혁신역량을 집중하는 공간거점으로 활용

### ■ 세부 과제

- ①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등을 통한 디딤돌 일자리 경험 제공
- ② 사회적경제 중심의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 ③ 지역인재 펠로우십 운영과 거점 공간 조성

[ 관련 정당 공약 ]

| 출처             | 구분                   | 관련 내용   |
|----------------|----------------------|---|
| 녹색당 (2016)     | 청년·사회와 새로운 계약 맺기     | 3) 교육권, 주거권, 노동권 등, 청년세대의 권리를 보장하겠다. 나.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등,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 다. 청년세대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녹색/지역순화경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
| 더불어 민주당 (2016) | <더불어성장 보고서>          | <p>공정경제</p> <p>① 청년경제 활성화 - 청년일자리 70만개,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 5만호 제공</p> <p>② 비정규직 차별 철폐 - 동일노동·동일임금, 사유제한제 도입</p> <p>③ 소득불평등 완화 -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확대, 적정 임금제·임금분포공시제 도입</p> <p>④ 상생협력을 통한 공유가치창출 - 이익공유제 전면 확대</p> <p>네트워크경제</p> |
|                | 청년일자리 70만개와 청년안전망 도입 | <p>공공부문 일자리 34만8천개</p> <p>청년고용의무할당제 한시도입 25만2천개</p> <p>주40시간 준수 등 실노동시간 단축 11만8천개</p> <p>취업활동비 지급(월 60만원 x 6개월)</p> <p>패키지형 공공고용서비스 제공</p>  |

### 3. 청년들의 동네 경제권 강화

#### (1) 청년들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 청년들의 지역사회 사회적경제취업 및 창업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실전 근무 경험 내지 인턴십 제공 확대
  - 1인 창조기업 및 지식서비스 분야를 묶어줄 수 있는 모듬 스튜디오 및 프리랜서 협동조합 지원
  - 기업 CSR 및 엔젤투자자와 청년 사회적경제창업자간의 정보네트워크 ‘엔젤네트 워크’ 형성 지원
- 학교에서 지역 사회 사회적경제일터로의 이동 지원 체계 구축 및 지원
  - 지역사회 사회적경제취업 희망 청년들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 (지역별 사회적 경제분야 인재 등록 및 관리)

#### (2) 대학과 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 협력 강화

- 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 연계 R&D 강화
  - 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 싱크탱크로서의 대학연구력 강화
  - 사회적경제 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연구 기금 지원
  -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과의 연계
- 민·관·학 사회적경제 협의회 구축(Private-Public-People-Partnership)
  - 대학, 정부부처, 지역교육청 등 교육위원회, 지방정부, 경영자연합회, 사회적경제 당사자 네트워크, 노동시장 및 청년 관련 조직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 ▣ 세부 과제

- ① 청년들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 ② 대학과 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 협력 강화

#### [ 관련 정당 공약 ]

| 출처          | 구분      | 관련 내용  |
|-------------|---------|--|
| 새누리당 (2016) | 일자리 더하기 | I. [2030청년] 미래 일자리 더하기<br>○ 청년 희망 아카데미와 함께 청년의 꿈 키우기!<br>“대학 졸업자부터 만34세까지 청년들의 확실한 취업 보장을 위한 청년 희망 아카데미(청년희망재단에서 운영)를 3년 내에 전국 16개 시도도 확대(※청년 희망 펀드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하여 지역 청년들에게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청년과 기업간 일자리 매칭 추진<br>IV. [사회·경제적 약자] 등잔밑 일자리 더하기!<br>○ 사회적 기업 확산으로 일자리 나누기!<br>“사회적 거래소 설립, 사회적 투자자 육성, 시니어 재능기부뱅크 |

| 출처         | 구분                   | 관련 내용   |
|------------|----------------------|---|
|            |                      | 구축”   |
|            | 공정 곱하기               | I. 희망사다리 구축<br>○ 취약 근로자의 직업훈련 지원 확대!<br>- 약 10만명 비정규직·청년 훈련지원비 증액 및 응시료 지원 혜택 예상  |
| 정의당 (2016) | <20대 총선 공약> 정의로운 경제론 | 2. 「정의로운 경제론」 8대 과제<br>- 내 월급이 오르는 경제 (평균 300만원 달성) : 최저임금 1만원, CEO 임금상한제, 원하청 초과이익공유제<br>- 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 : 비정규직 제한, 해고 규제, 노동시간 단축, 성별 격차 해소<br>- 청년 일자리와 주거권 보장 : 5% 청년고용할당제, 청년디딤돌 급여, 고시원/옥탑방 탈출<br>- 농민·상인·지방 살리는 경제 : 식량자급률 법제화, 골목상권 보호, 지역특화산업 육성<br>- 미래를 향한 혁신 경제 : 사회적경제, 강소기업, 복지경제, 평화경제, 탈핵경제<br>- 정의로운 재벌 개혁 : 재벌의 불공정 갑질, 골목상권 진출, 지배구조 개혁<br>- 정의로운 조세개혁 : 법인세와 소득세 강화, 사회복지세와 탄소세 신설 |

4

건강의 평생친구, 주치의 제도  
평생주치의로 건강한 삶, 행복한 마을

▣ 과제별 해설

1. 노인 주치의 사업

-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저출산 현상 지속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노인의료비가 상승하고 있음. 노인 만성질환자는 포괄적,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함. 현재 치료중심의 의료행위가 2, 3차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방중심의 건강증진이 절실히 필요함.
- 보건의료자원의 배분에 있어 효율성과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방향으로 1차 의료를 강화하고,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의료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수단으로 주치의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주치의 도입방향은 일부 특정주민(70대이상 노인)에 대해 적용하되, 의료공급자와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출발기초로 1단계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프로그램과 합리적인 운영모형을 개발하고, 2단계에서 70대이상 노인들을 중심으로 서비스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3단계 서비스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이 고려되어야 함.
- 주치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해 지불보상은 인두제를 기본으로 환자의 특성에 따라 인센티브 지불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 주치의 제도의 도입시행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사이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주치의 협력의원간의 네트워크 또는 공익적 활동을 하는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 세부과제

- ① 노인 선택의원 등록제도 실시
- ② 지불 보상방식 전환(행위별 숫가제에서 인두제)

[ 관련 정당 공약]

| 출처         | 구분                       | 관련 내용   |
|------------|--------------------------|---|
| 녹색당 (2016) | 4-3 <건강의료> 예방을 우선하고 공공성과 | 1. 예방 중심의 의료와 지역사회 공동체 돌봄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br>- 건강 생활 지원 센터를 운영<br>- 건강영향평가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강화 |

| 출처          | 구분                     | 관련 내용  |
|-------------|------------------------|--|
|             | 형평성을 강화한다              | - 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 지원을 확대<br>-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성인에게 확대<br>2.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br>-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의료인력을 균형적·공공적으로 양성<br>- 일차의료체계를 복원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재구축<br>- 지역별로 병상, 각종 시술·검사 장비 등에 대한 지역 총량제를 도입<br>- 공공병원을 확충하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강화하고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br>3. 건강 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을 강화<br>- 국가와 기업의 의료비 부담을 늘려 모든 이의 건강을 보장<br>-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든 건강보험을 통해서 의료 보장 |
| 새누리당 (2016) | 어르신 맞춤형 복지             | ② 어르신 동네의원 진료비 부담 완화<br>○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급증과 본인부담 감소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 등으로 어르신들의 가장 큰 경제적 부담 요인은 바로 병원 진료비임.<br>-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비 정액제 기준은 1만 5천원으로 기준액 이내에서는 1,500원 만 부담하면 되지만, 1만 5천원에서 10만원 더 나와도 그 이상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30%의 의료비를 본인 부담해야하는 상황임.<br>-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비 정액제 기준을 1만 5천원에서 2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어르신 의료비 부담을 점차 완화해 나가겠음.                |
| 민주당 (2014)  | 보건의료분야                 | 1. 동네의원 살리기와 의료공공성 확대 적극 추진<br>2. 간병보험 신설 및 보호자 없는 병원 전국 확대<br>3. 선택진료비 폐지로 의료비 절감   |
| 정의당 (2014)  | 보건의료분야<br>지역공공보건의료 활성화 | 시민 건강 참여위원회 구성<br>보건소, 공공병원에 시민참여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의료음부즈만 실시<br>건강책임부서를 만들어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아동주치의제도 실시  |

2. 장애인 주치의 사업

-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취약 계층의 건강 불평등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음.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들이 의료 서비스를 적절히 받지 못하는 요인으로 의료비는 높으면서 소득이 낮으며, 혼자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견줘 건강 및 기능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지 못할 경우에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관리제도 장치가 없음.
- 장애인 주치의제를 도입해 1차 진료는 주치의, 2차 진료는 국립대학병원 중심의 광역 제활

원, 3차 진료는 국립재활원이 담당하는 장애인 의료전달체계 구축도 시급함. 장애인 주치 의사업도 시범적인 시행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주치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수가 인센티브(증상기적으론 진료비 지불제도의 변화), 장애인 의료 인프라 구축, 장애인의료발전기금' 제정 등이 필요함.

■ 세부과제

- ① 장애인 건강지원센터 운영
- ② 장애인 의료발전기금 조성
- ③ 장애인 건강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 관련 정당 공약 ]

| 출처         | 구분                      | 관련 내용   |
|------------|-------------------------|---|
| 녹색당 (2016) | 장애인_배제에서 어울림으로          | 1) 장애인의 생존권과 활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혁하겠다<br>2) 장애인과 어울려 사회는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br>3)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  |
| 새누리 (2014) | 복지제감 100℃ 장애인복지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 및 맞춤형 연금보험상품 도입<br>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보조기구센터 설치<br>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및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대상 확대   |
| 민주당 (2014) |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잘사는 대한민국 | 8-3. 장애유형과 특성별 예방 및 관리시스템을 확충하여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br>8-4.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br>8-5. 지역사회 자립중심으로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br>8-6. 소수·중증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br>8-7. 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br>8-8. 장애인 교육의 질 향상으로 교육권 보장<br>8-9. 장애인의 일자리 확충으로 장애인의 근로권 보장<br>8-10.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및 시·청각 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보 |
| 정의당 (2014) | 참여와 통합을 위한 장애인 자립기반     | 1. '장애인 공기업'을 설립하여 좋은 일자리 만들기<br>2. 장애인의 이동과 편의 증진을 위한 복지택시 운영<br>3. '유니버설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으로 모두가 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 새누리 (2012) | 장애인복지 내실화               | 장애인 의료보장 강화<br>- 장애인이 일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의료비를 2년간 지원하는 '이행급여' 제 적용·실시  |

3. 장애인 통합재활센터 운영

- 장애인이 치료를 마치고 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재활치료가 일상적으로 연결되

지 않음. 재활 운동이 필요한 장애인이나 환자들은 보통 국립재활원등 재활원에서 재활 훈련을 받음. 그러나 3개월 이상 입원이 되지 않는 관계로 3개월 후에는 퇴원을 하고 지역사회로 돌아가게 됨.

- 퇴원 이후 어떤 곳에서도 이들의 재활에 대해 관여하고 개입하고 있는 곳이 없음.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다시 환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음.
- 지역사회통합재활센터에서 재활원등에서 퇴원하는 환자에 대하여 집에서 운동하거나 통합 재활센터에 나와 운동할 수 있게 하고, 질환별 자조모임 운영이나 생활처방(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의사 및 간호사와 연계),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의사와 지역의 의료인들 연계망 구축, 방문진료 등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통합재활센터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함.

**5** **인권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 돌봄**

▣ 과제별 해설

**1. 가족부담을 덜고 우리 동네에서 노년을 맞이 위한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확충**

○ 현황

-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13%를 넘어섰으며, 평균수명의 증가로 질병노인뿐 아니라 허약노인도 급증하고 있음.
- 경증질환`허약노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거의 없어 질병`장애 발생 시 병원→가정→요양(병)원의 절차를 밟게 됨으로써, 사회적으로는 노인의료비를 급증시키고 수발에 따른 가족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본인들도 기능을 온존`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 더구나 2014년 말 현재 노인요양서비스 제공기관 16,543개 가운데 지방단체의 비율은 기관 수의 0.1%, 정원의 0.5%에 불과하고, 개인·법인사업자가 다수를 차지하면서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노인의 인권을 훼손하는 등 사회문제가 일어나고 있음.
- ‘aging in place’ `healthy ageing’, 곧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으며 가능한 한 자립성을 유지하며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전세계적 추세임.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사회 돌봄이 확충되어야 하며, 이는 이윤 추구가 중심이 아닌 협동조합 등에 의해서 공급되어야 함.

▣ 세부과제

- ① 시군구별 1개소 이상 공공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노인요양원 설치
- ② 정부의 노인종합돌봄서비스 2배 이상 확대
- ③ 공공성,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어르신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 ④ 가족과 어르신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수발`요양 정보 제공, 노인가구의 주거`안전관리, 방문사례관리 등을 총괄하는 ‘가족안심 우리마을 어르신센터’ 설치

[ 관련 정당 공약 ]

| 출처         | 구분               | 관련 내용  |
|------------|------------------|--|
| 녹색당 (2016) | IV.같이일하며 어울려사는세상 | IV-2-2) 복지 가. 돌봄의 공공인프라 확충: 국공립어린이집과 국공립요양시설 |

| 출처         | 구분              | 관련 내용  |
|------------|-----------------|--|
|            |                 | 확충<br>다. 복지서비스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립<br>라. 지역사회 서비스 공공일자리를 확대  |
| 정의당 (2014) | 어르신을 위한 ‘노후기본선’ | -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를 2배 확대로 노후돌봄 사각지대 해소 (98쪽)<br>- 노노(老老)케어 일자리: 건강한 어르신들이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어르신들간의 특성 이해 및 경험 공유<br>- 은퇴자 사회 기여 및 소득보전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은퇴자맞춤 협동조합’ 육성(95쪽) |
| 새누리 (2012) | 우리집행복담기         | - 경증 치매노인 장기요양보험 확대 계획 마련, ‘13년 이후 단계적 확충<br>- ‘13년 이후 노인돌봄서비스 대상노인 확충   |

**2. 수요자와 종사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돌봄협동조합의 활성화**

○ 현황

- 맞벌이가정의 증가, 핵가족화로 가사관리, 산후관리, 아이돌봄 등 가정내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음. 하지만 여기에 종사하는 가사노동자(domestic workers)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되어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주요 전달체계가 직업소개소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과 고용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이용자, 종사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 많은 연구자들이 이미 제안하고 있듯이 가사노동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가정내 돌봄협동조합을 활성화하는 것이 건강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국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임.

▣ 세부과제

- ① 가사노동자 당사자들이 운영하는 돌봄협동조합에 대한 부가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교육훈련 지원
- ② 정부 돌봄바우처사업 종사자에게 생활임금 보장으로 고용안정과 서비스 질 개선
- ③ 한부모가정 통합돌봄서비스, 산후관리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대상을 2배 이상 확대하고 돌봄 노동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에 우선 위탁

[ 관련 정당 공약 ]

| 출처         | 구분               | 관련 내용                               |
|------------|------------------|-------------------------------------|
| 녹색당 (2016) | IV.같이일하며 어울려사는세상 | IV-2-2) 복지 라. 지역사회 서비스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겠다 |



| 출처         | 구분                  | 관련 내용  |
|------------|---------------------|--|
| 새누리 (2016) | 보도자료2탄              | [304여성] 일가양득 일자리 더하기!<br>○ 30대 여성 재취업 특화 프로그램 강화<br>- 새일센터 확대 효과 : '15년 14만명 → '19년 18만명<br>[6070실버] 참여형 일자리 더하기!<br>○ 2017~2020년 동안 어르신 일자리 연간 10만개씩 확대<br>- 재능나눔 일자리 기간 연장(현6개월→9개월) 및 매년 1만개, 공<br>익활동형 일자리 매년 6만개, 시장취업형 일자리 매년 3만개 추가 |
| 새누리 (2014) | 가족행복2014            | 엄마·아빠 : 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대상 3배 확대  |
| 민주당 (2014) | 보건의료분야              | 저렴하고 안전한 국공립 공공산후조리원 대폭 확충, 공공의료기관<br>과 연계를 통한 통합형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모델 도입(149쪽)   |
|            | 노동분야                | - 공공사회서비스 및 사회적기업 확충을 통해 중장년 일자리 창출<br>- 취업지원서비스에 은퇴한 고용전문가를 활용하고, 유아돌보미,<br>아동통학지도, 지역문화재 발굴관리단, 야간 길거리안전보장팀 등<br>생활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일자리 확대(207쪽)  |
|            | 여성·가족분야             | ○ 한부모·조손가정에 대한 보육, 아동학습 지원, 생활가사 등에<br>대한 통합지원 프로그램 시행(278쪽)   |
| 정의당 (2014) | 아이와부모를<br>위한'육아기본선' | 구립산후조리원 설치, 산모바우처 확대(89쪽)  |
|            | 어르신을 위한<br>'노후기본선'  | - 노노(老老)케어 일자리: 건강한 어르신들이 요양이 필요한 어<br>르신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어르신들간의 특성<br>이해 및 경험 공유<br>- 은퇴자 사회 기여 및 소득보전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은퇴자맞춤<br>협동조합' 육성(95쪽)   |
|            | 지역순환<br>경제 구축       | 사회적경제에 대한 신규 공공서비스 공급을 30%까지 확대(166<br>쪽)  |
| 새누리 (2012) | 우리집행복담기             | ○ 30-50대 여성을 위한 재취업 및 창업지원<br>- 전업주부 및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새일센터 확대(4쪽)<br>-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4쪽)<br>- 고령자에게 적합한 실버카페, 베이비시터 등 5대 'Senior Biz'<br>사업아이템을 선정, 브랜드·마켓팅·인테리어 표준화를 통해 경쟁력<br>강화(6쪽)   |

### 3. 기초지자체별 돌봄계획의 수립과 지역돌봄센터 설치

#### ○ 현황

- 돌봄은 성별과 연령을 불문하고 전세대에서 필요한 서비스이며, 지역사회를 테두리로 수요와 공급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지역사회 서비스임.
- 하지만 현재 계획과 관리가 복지부,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정부의 관심은 저조한 상태임. 또 공급이 민간에 내맡겨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정확한 정보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며, 종사자들은 체계적인 교육훈련이나 고충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기초지자체 단위로 정기적인 돌봄 수요공급 조사와 돌봄지역계획을 수립하며, 주민들과 종사자를 상담, 교육하는 센터의 설치가 필요함.

#### ■ 세부과제

- 1 기초지자체 단위의 지역사회 돌봄계획의 수립과 지역주민 중심의 돌봄위원회 설치
- 2 지역주민과 종사자, 기관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 및 상담,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지역돌봄센터 설치

#### [ 관련 정당 공약 ]

| 출처          | 구분                    | 관련 내용  |
|-------------|-----------------------|--|
| 녹색당 (2016)  | I.정책통합-성평등            | I-1-2-2) 서로 돌봄의 사회적 대안인 마을공동체에 다양한 여성들의 삶을 만든다<br>I-1-2-3) 지역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커뮤니티 출산지원센터를 구축한다.   |
|             | IV.같이일하며여울려사는세상-1, 노동 | IV-1-3) 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안경제를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만들겠다<br>-공공복지서비스 확대 등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br>-사회적경제를 확대하고 대안적/녹색일자리를 창출하겠다  |
|             | IV.같이일하며여울려사는세상-복지    | IV-2-2) 지역사회 돌봄공동체를 육성·지원하고 재가복지를 확충<br>가. 기본서비스 권리의 확립1: 재가서비스와 활동보조인서비스를 통해 생존권을 확보<br>다. 기본서비스 권리의 확립3: 가족지원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br>라. 지역사회 서비스 공공일자리를 확대   |
| 새누리당 (2016) | 어르신 맞춤형 복지            | ⑤ 홀몸 어르신 돌봄서비스 강화<br>○ 홀로 계신 어르신의 경우 가족과 함께 사는 분들보다 고독사·자살, 안전 문제, 결식 등의 우려가 있음.<br>- 홀몸어르신에 대한 안부 확인 및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자살 예방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음.<br>- 이를 위해 홀몸 어르신에 대한 생활관리사의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복지 서비스 연계를 보다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보건 및 복지서비스, 민간 자원을 연계한 통합적 자살예방사례관리 등을 강화해 나가겠음. |
| 민주당 (2014)  | 복지분야                  | 각 지역의 요양관련 각종 서비스나 정보를 통합하여 요양으로 고민하고 있는 노인 본인은 물론 떨어져 사는 자식들의 고민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요양방장제도'도입(153쪽)  |

## 6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이끄는 사회적 경제

### ▣ 과제별 해설

#### 1.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 ○ 현황

- 현재 전국 곳곳에 시민 주도형 에너지 생산 협동조합이 설립, 운영되고 있음.(2015년 약 30여개의 협동조합 설립) 반면 정부 및 지자체의 자금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상업적 발전회사도 우후죽순 만들어지고 있음.
- 이 과정에서 협동조합 형태로 추진하는 경우 설비 자금의 조달과 필요한 토지, 공간의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반대로 상업적 발전회사의 경우 정부 지원금 등에 의존하고 발전시설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재하여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역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도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이들 지역에 협동조합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임.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을 기반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소비 정책을 수립한다면 지역사회의 경제적 발전과 활성화에도 기여하면서 주민들의 동의에 기반을 둔 에너지 전환을 앞당기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국가, 지자체 차원의 정책목표 수립과 장기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공유지의 장기입대 정책, 발전단가의 안정적 보장 등의 정책이 필요함. 또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증진에도 힘써야 함.

##### ▣ 세부과제

- ① 시민 주도형 재생 가능한 에너지 협동조합의 확산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목표 수립
- ② 안정적인 시민주도 에너지 사업의 보장을 위한 국공유지 및 활용가능한 유휴공간의 장기 입대
- ③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시설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지원과 발전단가의 보장
- ④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 [ 관련 정당 공약 ]

| 출처             | 구분            | 관련 내용   |
|----------------|---------------|---|
| 녹색당 (2016)     | 에너지정책         | <b>에너지기후 : 경제의 녹색화를 위한 대전환(10쪽)</b><br>1) 2030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br>2)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녹색화'를 추진하겠다.<br>3)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고 에너지 자립 정책을 추진하겠다<br>4) 기업의 에너지 요금을 인상하고 에너지기본권을 보장하겠다.<br>5) 에너지 부정의 해소, 공동체에너지와 녹색경제-녹색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   |
| 더불어 민주당 (2016) | <더불어 경제론>     | <b>미래산업의 선점 - 핵심 신산업분야 집중 육성 중(9쪽)</b><br><b>○ 신재생에너지의 획기적 확대</b><br>- 선진경제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의 에너지 자립도와 에너지 효율성을 가진 상태임. 원자력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나고, OECD 최하위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임.<br>- 또한 2015년 「파리협정」으로 신기후체제가 출범한 가운데, 2011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7위 및 증가 속도 3위라는 위기적인 상황에 있어 전기차 등을 포함한 친환경·고효율의 자동차 산업의 육성이 시급한 상황임<br><b>□ 대책</b><br>○ 항공·우주산업, 제약·의료산업, 재생에너지산업, IoT·소프트웨어산업 등을 핵심 신산업·혁신분야로 집중 육성<br>- 기존에 투입된 정부에서 배정한 연구개발 예산을 2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 지원책을 대폭 강화 |
| 새누리당 (2016)    | <일자리더하기 1탄>   | <b>(3) 미래성장역 일자리 만들기(11쪽)</b><br>○ 기존 19대 성장 동력 분야에 대해 사업 특색에 따른 정밀 맞춤형 규제개혁 실시<br>○ 태양경제, 수소경제, 탄소경제, 물경제, 지능경제 등 5대 고부가가치 분야 육성으로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을 변화<br>-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는 분야에 집중 투자  |
| 정의당 (2016)     | <정의로운경제론>해설자료 | <b>탈핵 2040과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면 확대와 집중 육성(22쪽)</b><br>● 2040년까지 노후원전 폐쇄, 신규원전 중단으로 탈핵 실현<br>●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폐지 석탄화력발전소의 대안으로 저탄소, 저감등 전원인 천연가스발전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징검다리 발전원으로 활용<br>● 대형 신재생에너지는 공급의무화제도로, 소형 신재생에너지는 발전 차액지원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다차원적 발전 확대   |

## 2. 도-농의 상생과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림어업분야 협동조합의 육성과 활성화

### ○ 현황

- 현재 국내 식량 자급률은 23%에 불과함. 개방농정이 가속되면서 농촌의 활력은 떨어지고 농업 경쟁력도 낮아지고 있음. 결국 식량, 먹거리의 생산-소비를 대외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음. 지금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민은 매우 고령화되어 농촌과 농업의 활력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실정임. 농협 역시 노령화된 조합원에 의한 통제와 민주적 경영이 안 되는 문제를 안고 있음.

- 젊은 농민이 농업을 업으로 생각할 수 있는 농촌을 만들어야 함. 그 방안으로 농림어업분야 협동조합의 육성과 활성화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기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주어지고 있는 정책적 지원이 이 분야 협동조합에도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함. 또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에 협동조합의 유형을 추가하여 협동조합 방식의 농림어업분야 경영체 설립을 촉진해야 함.

- 기존 농협의 개혁도 중요한 과제임. 농협중앙회 회장의 선출을 조합장 직선제로 우선 개혁함으로써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함. 또한 신용사업에 비해 중요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경제사업을 강화해야 함.

### ■ 세부과제

- ① 농림어업분야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정책 정비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기존의 농림어업 분야 경영체 지원정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 정책 및 지원 대상 정비
- ② 농업협동조합의 민주화(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 및 경제사업 강화

### [ 관련 정당 공약 ]

| 출처             | 구분        | 관련 내용  |
|----------------|-----------|--|
| 녹색당 (2016)     | 먹거리·농업    | 먹거리·농업_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이 우선이다(12쪽)<br>1)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국민들에게 제공한다.<br>2) '사회적 농민'을 키울 것이다.<br>3)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지키고, '사회경제적 농업'을 살리겠다.<br>4) '사회생태적 농촌'을 지키겠다.<br>5) 농업과 농촌의 주체 농민여성의 역할과 권리를 향상한다.  |
| 더불어 민주당 (2016) | <더불어 경제론> | 도농상생(15쪽)<br>- 건강한 도시와 풍요로운 농촌을 위한 푸드플랜 전국 확대<br>○ 국가 먹거리 총괄계획으로 푸드플랜을 수립함<br>- 먹거리 정책을 기존 개별적 관리에서 로컬푸드 생산, 유통, 식품업소 점검 등 통합적 관리로 변환하고, 먹거리 영역을 식품공급에서 건강, 환경, 경제, 공동체, 문화 등까지 확장시켜 국가 총괄계획으로서 푸드플랜을 수립함<br>-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로컬푸드 수급상황 및 식품안전 등을 총괄한 푸드플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서는 이에 맞춰 |

| 출처          | 구분            | 관련 내용  |
|-------------|---------------|--|
|             |               | 지역 농업상황에 맞는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함<br>○ 공공기관 전체로 급식을 확대하고, 학교급식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확대<br>- 복지시설, 학교, 병원, 군대 등 정부와 지자체에 관련한 모든 공공기관에 급식을 제공하고 지원함<br>- 현재 중학교까지 제공하는 학교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친환경 급식으로 확대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구현함   |
| 새누리당 (2016) | <일자리더하기 1탄>   | 농어업,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자금 확대!(8쪽)<br>“농신보 부분보증비율 현행85%에서 90%로 확대 및 귀농귀촌인 맞춤형 지원 강화”<br>[현재는]<br>○ 농어촌에는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과 사업전망이 있는 경영체들이 많으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음<br>○ 귀농귀촌 희망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영농초기 안정적인 정착 지원 필요<br>[미래는]<br>○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히 농어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농신보 부분 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0%로 확대<br>- 신용보증규모가 5조 3천억에서 5조 8천억으로 10% 가까이 증가됨<br>○ 농신보 보증요율을 현행 3단계, 최대 1.2%에서 5단계 최대 1.0%로 인하<br>- 보증료 부담이 450억에서 405억으로 10% 수준 완화됨 |
| 정의당 (2016)  | <정의로운경제론>해설자료 | 식량자급률법제화, 청년취업농 육성 등 농민과 농촌 살리기(16쪽)<br>● 중장기 식량자급률 50% 달성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적정농지 확보 법제화<br>●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적정가격보장제 도입,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부활로 가격 지지<br>● 청년취업농지원제도 도입과 귀농귀촌 지원대책 강화로 신규 농업인력 적극 육성<br>●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1마을 1공동생활주택(그롭하우스) 등 농촌 생활환경 개선<br>● 지역먹거리체계 구축, 농촌형 마을기업, 공동급식 등 지속가능한 농촌형 일자리 창출<br>● 시장개방으로 이익을 얻는 산업에 무역이득부담금제를 도입해 농업 피해보전 의무화   |

## 3. 농촌과 연계, 연대하는 도시민의 소비협동조합 활성화

### ○ 현황

- 현재 한국 생협은 조합원 100만 가구, 사업규모 1조원의 규모로 성장했음. 개방의 파고가 한층 더 높아지고 농촌, 농업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농촌, 농업의 미래를 설계하고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촌과 연계,

연대하는 소비자 조직의 활성화가 크게 기여할 수 있음.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곧 소비생활의 안정성으로 이어지고 소비기반의 안정적인 확보는 농업의 안정적 유지와 지속을 위한 바탕이 되기 때문임.

- 이를 위해서는 현재 활성화의 단계에 접어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소비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임. 이와 함께 도-농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소비자들이 지속가능한 농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세부과제

- ① 아파트 단지, 마을단위 소비자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활성화
- ② 기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 국내산 농축수산물 직거래사업 활성화
- ③ 도시 소비자 협동조합 - 농촌 생산자 협동조합 간 교류활동 활성화

[ 관련 정당 공약 ]

| 출처             | 구분            | 관련 내용   |
|----------------|---------------|---|
| 녹색당 (2016)     | 일자리 창출        | <p>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안경제를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만들겠다.(8쪽)</p> <p>가. 공공복지서비스 확대 등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p> <p>나. 녹색경제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겠다.</p> <p>다. 사회적경제를 확대하고 대안적/녹색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수출 중심의 탄소경제에서 순환 중심의 사회적경제로 전환하겠다.</p> <p>가.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고 녹색일자리를 확대하겠다.</p> <p>나.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영역을 강화하겠다.</p> <p>다. TPP 등 수출 중심의 경제를 강화하는 자유무역체제로부터 벗어나겠다.</p>   |
| 더불어 민주당 (2016) | <더불어 경제론>     | <p>도농상생</p> <p>- 건강한 도시와 풍요로운 농촌을 위한 푸드플랜 전국 확대</p>   |
| 정의당 (2016)     | <정의로운경제론>해설자료 | <p>식량자급률법제화, 청년 취업농 육성 등 농민과 농촌 살리기(16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기 식량자급률 50% 달성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적정농지 확보 법제화</li> <li>●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적정가격보장제 도입,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부활로 가격 지지</li> <li>● 청년취업농지원제도 도입과 귀농귀촌 지원대책 강화로 신규 농업인력 적극 육성</li> <li>●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1마을 1공동생활주택(그룹홈) 등 농촌 생활환경 개선</li> <li>● 지역먹거리체계 구축, 농촌형 마을기업, 공동급식 등 지속가능한 농촌형 일자리 창출</li> <li>● 시장개방으로 이익을 얻는 산업에 무역이득부담금제를 도입해 농업 피해보전 의무화</li> </ul> |

**7** 다시 살아나는 지역을 만드는 사회적경제

■ 과제별 해설

1.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농산어촌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

○ 현황

- 사회적경제조직의 대다수가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낙후된 농산어촌 지역의 생산조직에 대한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음.
- 지역경제력의 절대적 불평등도는 1985년 52만원에서 2010년 1004만원으로 15년만에 20배 늘어나고 있으며(통계청), 특히 농어촌지역의 취약계층 비율은 도시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더구나 인구 변화를 추정한 결과 2048년까지 인구 5만 이하의 한계상황에 놓이는 기초지자체는 82개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보건사회연구원 2015) 낙후지역의 활성화 정책은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수적임.
- 따라서 영국의 CIC를 참고하여 낙후지역에서 활성화되지 않는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산업적인 측면은 물론 복지 측면에서도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닌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활성화되어야 함.
- 이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20대 국회에서 아래와 같이 이뤄져야 함

■ 세부과제

- ① 농어촌지역 의료 및 복지 전달을 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최소 1군1개소, 혹은 3~4개 읍면을 포괄하는 생활권 1개소 설립
  - 초기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협력체계 정비 제도지원
  - 사회적경제기금을 활용한 노인요양원, 요양병원의 장기대출 제도 정비
- ② 지역생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기업에 대한 지역기업인증제도 도입
  - 농산어촌 마을기업의 발전방향 제시 및 영농영어조합법인의 사회적경제 연계
  - 지역농림어업 발전을 위해 6차산업 지원정책을 사회적경제와 연계
  - 지역기업인증 사회적경제조직의 통합 마케팅 등의 지원

[ 관련 정당 공약 ]

| 출처             | 구분                                      | 관련 내용   |
|----------------|---|---|
| 녹색당 (2016)     | IV.같이 일하며 어울려 사는 세상<br>4-1. 노동          | 3. 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안경제를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만들겠다.<br>다. 사회적경제를 확대하고 대안적/녹색일자리를 창출하겠다.<br>○ 협동조합 중심의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br>○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녹색경제로, 대안일자리로   |
| 더불어 민주당 (2016) | 공약 6. 사회적경제 특구 지정으로 지역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 광역시도 및 기초 시군구 차원에서 지역의 특성과 사회적경제의 결합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적경제의 경쟁력 강화<br>○ 지역차원의 자원집중과 전략모델 개발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특구지정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과 새로운 지역성장동력 확보   |
|                | 더불어 함께 지역을 만드는 지역재생 사회적경제               | 1.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농산어촌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br>① 농어촌지역 의료 및 복지 전달을 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br>② 지역생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기업에 대한 지역기업인증제도 도입   |
| 새누리 (2014)     | 살기 좋은 농어촌                               | 농어촌에 교통과 의료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br>-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에 대한 병원선 운영 등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
| 정의당 (2014)     |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지역순환경제 구축                    | 7. 지역순환 경제사업단 및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마련 등 시군구 사회적경제 지역특화모델 육성   |
| 새정치민주연합 (2014) | 6. 지방자치·지역균형발전 분야                       | 2. 교육·의료·문화 전 분야에 걸친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수준을 향상시켜 살고 싶은 지방 만들기<br>○ 농어촌 노인종합건강지원센터 확대<br>다. 복지서비스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립라. 지역사회 서비스 공공일자리를 확대   |
|                | 13. 보건의료분야                              | 1. 동네의원 살리기와 의료공공성 확대 적극 추진<br>○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br>-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원격의료 대신 방문간호 서비스를 확대  |
| 민주통합 (2012)    | 비전3<br>보편적복지 확충                         | 4.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인프라 개혁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br>4 - 9. 도시 보건지소와 농어촌지역 노인종합건강관리센터 확충을 통한 평생 건강관리 제공<br>- 농어촌 노인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농어촌 지역 기초자치단체당 1개소 이상씩 노인종합건강관리센터 확충<br>- 방문건강관리 간호사를 대폭 확충하여,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2. 도시와 농촌의 지자체, 민간 사회적경제조직이 협력하는 귀농귀촌 정거장 운영

○ 현황

- 도시일자리 절벽, 주거비 증가 등으로 인해 귀농귀촌이 다시 확대되고 있음. 귀농귀촌은 2014년 11,144가구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귀촌가구도 33,442가구로 전년에 비해 55% 증가하였음.
- 하지만 농촌 부적응, 농업경영실패, 소득 부족 등으로 도시로 돌아오는 가구도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
- 정부 차원의 지원은 금융지원이 중심이므로, 귀농귀촌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 귀농귀촌의 활성화가 어려움. 각 지자체들의 개별적인 귀농귀촌정책의 한계를 넘어서 민간의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계하여 도시와 농촌의 지자체가 협력하는 귀농귀촌 정거장을 마련하여 낙후지역의 인적 자원을 확보하도록 20대 국회는 노력해야 함.

■ 세부과제

- ① 귀농귀촌 준비부터 마을정착까지 사회적경제의 윈스톱 플랫폼 마련
  - 귀농귀촌 희망자 발굴 및 통합교육, 정착을 도시-농어촌 지자체가 함께 운영
  - 도시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산관리, 농촌지역의 영농영어기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생산된 농산물의 로컬푸드, 직거래 조직과 연계
- ② 자산 이동 및 농어촌 기반 확보를 위한 후건조직 역할에 대한 지원정책 도입
  - 도시지역 유흥자산의 임대협동조합 운영
  - 농지구입 등 농어촌지역의 단계적 자산 확보를 위한 농민협동조합 농지취득 및 분할에 따른 취득세 감면 등의 지원 대책 마련

[ 관련 정당 공약 ]

| 출처             | 구분                                  | 관련 내용   |
|----------------|-------------------------------------|---|
| 녹색당 (2016)     | III. 지속가능한 삶과 경제 녹색화<br>3-3. 먹거리 농업 | 4) '사회생태적 농촌'을 지키겠다.<br>- 농촌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 기반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을 기획, 관리, 운영할 '청장년 지역사회전문가(디자이너) 및 생활기술자' 발굴·육성하는 교육(학교)사업 중심의 중간지원조직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 모델 개발할 것이다. |
| 더불어 민주당 (2016) | 더불어 함께 지역을 만드는 지역재생 사회적경제           | 2. 도시와 농촌의 지자체, 민간 사회적경제조직이 협력하는 귀농귀촌 정거장 운영<br>① 귀농귀촌 준비부터 마을정착까지 사회적경제의 윈스톱 플랫폼 마련<br>② 자산 이동 및 농어촌 기반 확보를 위한 후건조직 역할에 대한 지원정책 도입   |

| 출처          | 구분                  | 관련 내용  |
|-------------|---------------------|--|
| 정의당 (2014)  | 어르신을 위한 '노후기본선'     | -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를 2배 확대로 노후돌봄 사각지대 해소 (98쪽)   |
| 민주통합 (2012) | 비전2. 경제민주화 실현과 민생안정 | <b>6. 신 복지농정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 있는 농어업을 만들어 식량안보를 지키겠습니다.</b><br>6-7. 성공적 귀농·귀촌을 위한 지원 확대<br>• 귀농·귀촌 정보시스템 통합하여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제공<br>• '귀농인의 집' 확대 운영, 주택마련 자금융자 및 수리비보조 확대 시행 |
| 새누리당 (2012) | 1.늘어난다! 일자리         | 인생이모작, 성공적인 인생 후반전을 지원합니다<br>(5)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한 맞춤형 지원<br>○ 귀농·귀촌 종합센터 확대·제편   |

### 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공유자산 기반 구도심개발, 주거환경개선

#### ○ 현황

- 도시지역에서는 대단위 아파트 개발 등으로 구도심 문제 지속적으로 발생, 하지만 그동안의 구도심 대책은 재개발 등 토건사업 방식 중심으로 진행되어 원주민 퇴출 문제 발생
- 예술인, 상인 등의 노력으로 상권활성화가 되어도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발생으로 다시 퇴락을 반복하는 문제점 발생(신촌, 이대, 홍대입구, 문래동 등)
-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공공예산으로 이미지 개선에 주로 투입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효과가 높지 못했던 문제 발생

#### ■ 세부과제

1. 표준임대료를 보장하는 공유자산 확보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도입
  - 주요 거점 건물을 지정하고, 공공자산으로 매입하여 장기임대 추진
  - 사회적경제기금과 부동산 투자신탁을 활용하여 거점건물의 공동 구입 지원
  - 거점 건물의 임대료를 중심으로 상하한선을 결정하도록 조례 제정 의무화
  - 거점 공유자산 건물의 임대료를 시장척도(yard stick)로 활용
2.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공유건물 도입 및 임대주택협동조합 설립 지원
  -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유건물 정책을 확대
  - 주거환경 개선시 희망주민에 대해 통합 건축, 건축비 지원
  - 지원된 건축비에 해당하는 면적은 임대주택협동조합으로 운영, 기존 주거민에 한해 매 매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유권 보장

### [ 관련 정당 공약 ]

| 출처          | 구분                                 | 관련 내용   |
|-------------|------------------------------------|---|
| 녹색당 (2016)  | II. 부를 나누고 함께 힘을 모으는 사회            | 1. 공정한 주거임대료 수준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겠다.<br>다.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토지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br>- 공공주택(임대, 토지임대부)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협동조합 참여를 장려하겠다.            |
|             | 2-2. 주거권과 토지정의                     | 2. 상가세입자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겠다<br>라. 임차인과 건물주가 포함된 상가권리금 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겠다  |
| 더민주 (2016)  | 공약 5. 사회주택 활성화로 청년주거빈곤 등 서민주거문제 해결 | ○ 날로 치솟는 전월세 및 주거비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주택 정책 도입<br>○ 비영리 공공주택 정책으로 청년주거빈곤 등 주거빈곤층의 생활 안정 및 지역안착 유도<br>○ 국민연금, LH공사, 지역도시공사등과 연계한 민관협력형으로 사회주택 공급재원 조달 |
|             | 더불어 함께 지역을 만드는 지역재생 사회적경제          | 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공유자산 기반 구도심개발, 주거환경개선<br>① 표준임대료를 보장하는 공유자산 확보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도입<br>②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공유건물 도입 및 사회주택협동조합 설립 지원                       |
| 정의당 (2014)  | 생애토대가 되는 주거복지 실현                   | 1.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주택의 20%로 의무화하는 '사회주택쿼터제' 도입<br>2. 지역별공공임대료제 도입 및 주택협동조합 지원<br>3. 1인가구 주택비율 5% 의무화 및 사회연대계약제 도입                                    |
| 민주통합 (2012) | 비전2. 경제민주화 실현과 민생안정                | 5. 가계부채와 생활물가의 안정을 통해 서민생활비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br>5-7. 전월세 상한제, 민간임대주택 등록제 도입으로 서민 주거안정 도모<br>•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및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br>•민간임대주택 등록제(등록계약임대주택) 도입  |